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충청권협의회

결성 기자회견

2004. 12. 17

충청하나은행 대강당

- 순 서 -

- 인 사 말
- 경 과 보 고
- 조 직 구 성
- 사 업 계 획
- 충청권 정치인 단합과 참여 호소문 낭독
- 결성 기자회견문 낭독
- 질 의 응 답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 충청권협의회

■ 경과보고

- [1] 2002. 12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으로 대선의 최대 쟁점이 됨.
- [2] 공약을 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2003년 2월「참여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재차 확인한 바 있음.
- [3] 그후 수십 차례의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친후 2003. 12월 29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와 83%의 절대다수 찬성으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제정 통과됨.
- [4] 특별법 통과 후 2004년 벽두에 중앙정부에서는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추진일정을 발표함.
- [5] 2004. 8. 11, 4개 후보지를 놓고 「후보지 평가위원회」에서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최 종입지를 확정 발표함.
- [6] 2004. 10. 2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으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의 효력이 상 실됨.
- [7] 2004. 10. 21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함.
- [8] 2004. 10. 22 충남·충북지사·대전시장 등 충청권 3개 시·도지사가 긴급회동을 갖고, 신행정수도건설은 철회되거나 백지화될 수 없으며 일관된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4개항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함.
- [9] 연기·공주 편입지역 주민은 물론 500만 충청인들은 현재 결정에 당혹감을 떠나 분노 로 확산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면서, 10/28 대전역에서, 11/3 천안아 라리오 광장, 11/9 충북도민대회, 11/22 조치원역 광장 집회 등 40회의 규탄대회가 개최 됨.

[10]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서명운동, 촛불문화제, 향의시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대표단 면담 등을 통해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의 정당성을 전국에 홍보함.

[11] 충청권 3시·도지사를 비롯한 지방4단체는 대통령 특별 면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대표 면담, 기자회견, 간담회 등을 통해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의 당위성을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하고 호소함.

[12] 2004. 11. 22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초정파적·범국민적 협력과 단결을 위하여 대전지역의 각계각층 대표들이 참석하여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대전시민연대』를 결성함.

[13] 2004. 11. 30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대전충남충북 단일기구 공동집행위원장단 1차 회의에서 초정파적·범국민적 단결과 협력을 위해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충청권협의회』결성의 취지에 공감하고 추진하기로 결의함.

[14] 2004. 11. 31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단결과 협력을 위해 『신행정수도건설 충북 비상시국회의』를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충북도민연대』로 확대개편함.

[15] 2004. 12. 1 범충청권협의회 결성과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에 대한 충청권의 단결을 위해 대전지역의 기관·단체를 총망라한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대전시민연대』출범식을 개최함.

[16] 2004. 12. 4 신행정수도 사수 및 현재 위헌결정 규탄 연기군민 제1차 꺾기대회를 서울 종묘공원에서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함.

[17] 2004. 12. 1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관련 강동석 건설교통부장 간담회를 지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성관광호텔에서 개최함.

[18] 2004. 12. 13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 충청권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회의를 대전,충남,충북 실무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청에서 개최함.

[19] 2004. 12. 17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 충청권협의회 결성 기자회견을 대전,충남,충북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하나은행 대강당에서 개최함.

■ 조직구성

1. 조직 명칭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 충청권협의회

2 조직의 구성

- 협의회 회의

· 구성

권역별 지방4단체장(12인)

국회의원 전원

각계대표 권역별 5인

(사회단체 연합2인, 대학총장협, 여성계,상공회의소 회장,예술계)

- 기능 /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후속 대책에 대한 공동입장을 마련하고, 범충청권의 단합의 상징 기구이면서 후속 대책에 대한 정치적 대응 방침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범충청권협의회의 일상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이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담당한다.

- 공동대표자회의(공동대표) / 3개권역별 추천 + 공주,연기 각 1인

<대전>

강대안(대전시개발위원회장)

김성구(대전의정회장)

박재묵(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공동대표)

송병희(대전사랑시민협회장)

이창기(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 상임대표)

<충남>

이병하(충남발전협의회장)

한창숙(충남새마을협의회장)

육동일(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 상임대표)

안성호(전국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

조춘자(충남여성단체협의회장)

한송현(리통장연합충남지부장)

이명남(당진제일감리교회목사)

<충북>

고병호(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 공동대표)

김명자(충북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신방웅(충북대학교총장)

박연석(전 청주시의회의장)

윤태한(바르게살기 운동충청북도협의회 회장)

<공주, 연기>

황순덕(신행정수도 지속추진 연기군 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황관익(공주시 신행정수도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 상임공동대표 / 각 권역별 2인씩 총 6인

<대전>

박재묵(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공동대표)

송병희(대전사랑시민협회장)

<충남>

한창숙(충남새마을협의회장)

육동일(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 상임대표)

<충북>

박연석(전 청주시의회의장)

김명자(충북여성단체협의회)

- 공동집행위원장단 / 권역별 2인

<대전>

김제선(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집행위원장,

신행정수도지속추진 범대전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박진호 대전시개발위원회 사무국장

신행정수도지속추진 범대전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충남>

이건휘(지체장애인협회충남지회장,
신행정수도사수 범충남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상선(지방분권운동충남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신행정수도사수 범충남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충북>

송재봉(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신행정수도지속추진 범충북도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 욱(신행정수도 충북연대 사무총장)
신행정수도지속추진 범충북도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집행위원회 / 지역별 집행책임자 2인+연기,공주 각 1인+분과위원장

<대전>

김제선(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집행위원장,
신행정수도지속추진 범대전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박진호 대전시개발위원회 사무국장
신행정수도지속추진 범대전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충남>

이건휘(지체장애인협회충남지회장,
신행정수도사수 범충남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상선(지방분권운동충남본부 공동대표,
신행정수도사수 범충남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충북>

송재봉(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신행정수도지속추진 범충북도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 욱(신행정수도 충북연대 사무총장,
신행정수도지속추진 범충북도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공주, 연기>

김일호(신행정수도 지속추진 연기군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정재욱(공주시 신행정수도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분과위원장>

홍보분과위원장

정책분과위원장
국민실천분과위원장
대외협력분과위원장
재정분과위원장
총무기획분과위원장

- 고 문 / 장관급 이상 출향인사, 각 언론사 사장, 대학총장 등으로 구성
- 지도위원 / 지방 4단체로 구성
- 자문위원 / 비충청권사회단체장, 학술단체장
기타 권역별 고문,지도,자문,공동대표로 구성

3. 참가단체(총 448개)

<대전> / 2004년 12월 16일 현재, 가나다순, 193개 단체

(사)농촌지도자대전광역시연합회, (사)대전광역시관광협회, (사)대전광역시의회정회, (사)대전방재연구소,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사)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사)청소년지도연구원, (사)해병전우회대전연합지회, 21세기여성정치연합대전지부, 6.25참전유공자회 전국중앙회, G.C.M, 갤러리아백화점동백점, 갤러리아백화점타임월드, 걷기모임대전지부, 고엽제후유증전우회, 과학기술특허포럼, 국제교류문화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나눔의마을, 남대전청년회의소, 녹색어머니대전광역시연합회, 녹색환경감시순찰대, 녹색환경감시순찰대중앙협의회장, 농협중앙회, 대덕대학, 대덕밸리벤처연합회, 대덕클럽, 대덕시자원봉사합창단, 대전건설협회,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광역시간호사회, 대전광역시간호사회,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전광역시대덕구자원봉사회, 대전광역시동구자원봉사회, 대전광역시산림조합, 대전광역시새마을회, 대전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대전광역시서구자원봉사회, 대전광역시유성구자원봉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원소방대연합회, 대전광역시자원봉사관리사협회, 대전광역시장애인연합회,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회, 대전광역시체육회, 대전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대전광역시한의사회, 대전광역시행정도우미자원봉사회,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행정동우회, 대전교차로, 대전대덕청년회의소, 대전대에너지정책연구소, 대전대학부속한방병원, 대전둔산청년회의소, 대전매일신문, 대전문화역사연구회, 대전불교사암연합회,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대전사랑운동본부, 대전산업단지협

회,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새마을경로학교,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시민조수류보호회, 대전시새마을금고, 대전시새마을부녀회, 대전신우신용협동조합, 대전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전애국지사승모회, 대전어머니회대전광역시연합, 대전언론문화연구원,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영재교육학술원,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웅변연설협회, 대전일보사, 대전적십자사대전충남지사, 대전전문건설협회, 대전지방검찰청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대전충남지구연합회, 대전지역사회개발협회, 대전지체장애인협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소년문화원,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대전충청재향군인회, 대전포유, 대전해외참전전우회대전시본부, 대전행복의전화, 대전홍익문화운동협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홍사단, 대전YMCA, 대전YWCA, 대한공인중개사협회대전광역시지부, 대한공인중개사협회대전지부, 대한민국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대한설비건설협회대전충남도회, 대한설비건설협회대전충남협회, 대한어머니회대전광역시연합회, 도시정책포럼, 동대전청년회의소, 동학민족통일대전충남지회, 되살이사랑나눔봉사회, 든든모임, 롯데백화점대전점, 민족통일대전광역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대전광역시협의회, 바른선거실천시민모임, 북대전청년회의소, 사랑의장기기증운동대전충남본부, 상동청소년회대전충남지구, 새마을문고대전광역시지부, 새마을지도자대전광역시협의회, 새여울풍물단, 서구를사랑하는모임, 서구문화원, 서구청소년상담실, 서대전청년회의소, 선양주조, 선우치매센터, 세진회, 소비자문제제연구하는시민의모임, 신탄진청년번영회, 씨큐택, 우송대학교, 원자력여성모임대전지부, 원자력을이해하는여성모임, 유성청년회의소, 육삼환경보존회대전지회, 의용소방대연합회,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이웃사랑나눔터회, 인간성회복운동대전충남협의회,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자전거출퇴근운동본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대전지부, 전국주부교실대전광역시지부, 전국환경감시협회, 정보화도우미, 정책거버넌스네트워크, 중구포럼, 중도일보사,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직장새마을운동대전광역시협의회, 청소년지도연구원, 충남대학교,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충청하나은행, 충청향우회대전지역교육연합회, 태권도협회, 평송청소년수련원평송장학회, 포럼뉴스, 푸른대전시민연대, 한국걸스카우트대전연맹, 한국공공행정학회, 한국공무원문학협회, 한국노인사랑운동본부, 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 한국범죄예방선도회, 한국범죄예방선도회충북본부,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대전충남지부,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한국여성경제인협회대전충남지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대전지부, 한국예총대전시지회, 한국옥외광고사업협회대전광역시지부, 한국자연환경순찰대중앙본부, 한국자유총연맹대전광역시지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대전충남도회, 한국청년회의소대전지구, 한국청소년대전광역시연맹, 한국청소년인성교육협회, 한국청소년지도보호사협의회, 한국포크송연합회대전충청지회, 한

국학원총연합회대전시지회, 한국SGI대전권, 한남대학교, 한밭국악회, 한밭대역협력기술연구소, 한밭대학교, 한밭사랑, 한호포럼, 해병대전우회대전광역시연합회,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 환경보전협회대전충남지회

<충남> / 2004년 12월 16일 현재, 총 103개 단체

(사)충청남도의정회, 건국회 충청남도지부,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 모임, 광복회, 국제라이온스 355-D지구, 국제와이즈맨, 기업인연합회, 농아인협회, 농촌지도자 충청남도연합회, 대전.충남 무공수훈자회, 대전상공회의소, 대전충남 재향군인회, 대전충남지부, 대전충남지사, 대전충남환경기술인협의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건설협회충청남도회, 대한건축사협회충남건축사회, 대한결핵협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충청남도지부, 대한노인회 충남, 대한미용사회 충청남도지회, 대한설비건설협회대전·충남도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대한약사회 충남지부, 대한어머니회 충청남도연합회장, 대한의사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전문건설협회충청남도회, 대한주부클럽 충남도지회, 대한주택건설협회대전·충남도회, 대한치과의사회, 대한한약협회, 대한한 의사협회충남지부, 도 자율방범 연합회, 로타리 3620지구, 로타리 3680지구, 리통리장연합회충남지부,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락회 충청남도지회, 상이군경회, 새마을금고 연합회 대전충남시도지부, 새마을문고 도지부, 새마을지도자 충청남도협의회, 아동복지시설연합회, 유흥·단란주점대전·충남도지회, 이북5도민 충남연합회, 자연보호충남협의회, 자유총연맹 도지회 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충남 시설협회,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충청남도지부, 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지방분권운동충남본부, 직장새마을운동협의회,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남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충남벤처협회, 충남북부 상공회의소,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충남서부 상공회의소, 충남시각장애인협회, 충남여성기업인협의회, 충남지구 청년회의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충남택시운송사업조합, 충청남도 새마을회, 충청남도 생활개선회, 충청남도 생활체육협의회,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충청남도 체육회,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 통일안보 중앙협의회, 한국 건강관리협회, 한국골재협회 대전충남지회, 한국광고사업협회 충남지부,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한국농업경영인 한국목욕업중앙회 충남도지회, 한국부인회 충남도지부, 한국서부지구, 한국세탁업중앙회 충남도지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전·충남지회,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 한국여성농업인 충남도연

협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충남지부회장, 한국예총 충남연합회, 한국위생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이용사회 충남도지회, 한국임가공협회 충남도지회, 한국정신요양협회, 한국추출가공협회도지회, 한국한센복지, 한국휴게실 중앙회도지회 협회대전충남지부, 환경보전협회

<충북> / 2004년 12월 16일 현재, 총 122개 단체

신행정수도건설충북연대,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개생보호충북지역후원연합회, 경로예절교육원, 고향을 생각하는주부들의 모임 충북지부,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충북협의회, 국민의식개혁국민운동충북본부, 국민화합충북연합, 국토사랑푸른숲운동,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충북위원회, 농가주부모임충청북도연합회, 녹색환경감시단, 대자연환경운동연합충청북도지부, 대한미용사회충북지회, 대한민국고엽제후유증 전우회충북지부, 대한어머니회충북연합회, 대한자연생태계보전연합, 대한조산협회충북지부, 대한주부클럽충북지회,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대한해외참전전우회충북도회, 민족정신회복국민운동충북도지부, 민족통일충북협의회, 4.19혁명동지회충북지부, 바르게살기운동충북협의회여성회, 바른선거실천충북시민모임, 바른정치구현충북연합회, 사회복지법인한국이웃사랑회충북지부, 산림보호충북협의회, 삼유회교통봉사대충북본부, 상해임시정보청사기념사업회, 새마을운동중앙회충북지부, 새천년지역발전협의회, 세계평화청년연합충북지부, 여성정치연맹충북연맹, 원자력을이해하는여성모임충북협의회, 음식물쓰레기줄이기실천운동본부, 자연보호충북협의회, 작은도서관충북협의회, 적십자봉사회충북지사협의회, 전국모범운전자충북연합회, 전국주부교실충북지부. 전문직여성청주클럽, 전의경전우회충북지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충북지부, 청주사랑시민연합, 청주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충북스카우트교수협의회, 충북정론회 충북지역사회선교협의회, 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간호사회, 충북도의선양협의회, 충북불교총연합회, 충북새마을부녀회, 충북생활개선회, 충북여성단체협의회, 충북영양사회, 충북자수협회, 충북적십자부녀봉사회, 충북학원연합회, 충북홍익문화운동연합, 한국B.B.S충북연맹, 한국가정법률청주상담소. 한국교통장애인협회충북지부, 한국대학원리연구회학사교구, 한국민족정신연합회, 한국범죄예방순찰대. 한국부인회충북지부, 한국시민자원봉사회충북협의회,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충북지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의사회, 한국 우주정보소년단충북지방본부, 한국유네스코충북협회, 한국자유총연맹충북도지회, 한국청소년충북연맹, 한국해양소년단충북연맹,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충북지부. 한마음카운셀링센터, 해병대전우회충북도지부, 흥사단청주지부.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충북도

지부)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충북지역개발회, 충북여성포럼, 청주상공회의소, 새마을운동충북도협의회, 충북여성단체협의회, 바르게살기충북도협의회, 충북청년회의소, 청주정실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문화원연합회, 민주평통자문회의 충북지부, 청주농촌지도자연합회, 청주개인택시조합, 청주향교 전교, 호남고철 오송분기역추진위, 충북농업경영인연합회, 청주YMCA, 청주YWCA, 청주환경연합, 청주시생활체육협의회, 충북자유총연맹, 충북적십자봉사회, 충북경제포럼, 충북모범운전자연합회, 홍일문화운동 충북연합, 한국범죄예방순찰대, 직지포럼, 충북정신지체인애호협회,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청주를사랑하는모임, 충북불교호범위원회위원장, 국민의힘, 충북사랑회, 청주CCC, 청주청년회의소, 서청주청년회의소, 청원청년회의소, 청주기독교연합회, 청주KYC

■ 주요 사업계획

1. 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연합 결성 제안

- 제안배경 및 내용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에 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연합 결성 제안
 - 획기적인 지방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국가의 중추적 관리기능의 지방이전을 일괄하여 강력 추진할 것을 촉구
 -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의 신행정수도 건설에 준하는 대책의 조속한 마련과 실행을 촉구
 - 국민적 지지와 참여를 촉진하는 국민운동의 전개를 사업과제로 제안

2. 제2차 범국민 쉼기대회 개최

- 일시 / 2005년 2월
- 장소 / 서울시내 일원

3. 국회농성단 운영

4. 후속 국민대회 개최 / 2005년 3월경 추진

5. 전국투어 및 홍보활동 추진 계획

- 분야별 분담

6. 전국투어 및 홍보활동 추진 계획

- 분야별 분담
 - 시민단체 - 지방분권
 - 국민운동단체 - 국민운동단체
 - 출향인사 - 행법련
 - 기 타 - 각계 참여 단체가 분담
- 지역분담

- 대전 - 경기, 전북, 광주·전남, 제주
- 충남 - 인천, 부산, 울산, 경남
- 충북 - 서울, 대구·경북, 강원

- 홍보물제작

- 홍보버튼, 유인물 제작
- 각 일간지 호외제작 요청 및 배포
- 영상홍보물 / 각 방송국 제작요청(수도권 집중 폐해 중심)

- 교육교재 제작 및 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학교수업 추진

- 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 전국 순회 공연단 추진

■ 정치권 참여 호소문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을 위한 충청권 정치인의 단합과 참여 호소문

우리는 오늘 수도권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염원하는 대전,충남,충북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모아,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 충청권 협의회』를 3개 시도 5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결성함을 선언 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직면한 이래,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과 지방4단체의 정치인들이 보여주신 신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믿음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충청권 정치인 여러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신행정수도건설 위헌결정 이후, 그동안 50여차례의 크고 작은 각종 규탄대회가 잇따른 것에서 확인되듯, 500만 충청인들의 충격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500만 충청도민들은 다소의 불이익과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유력한 정책대안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없는 지방분권은 지역 격차의 심화만을 가져올 것이며, 신행정수도 없는 균형발전 시책은 그동안의 경험에서 보듯 수도권 집중만 초래하고 불균형은 심화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충청지역민들은 충청권만의 지역 이기적 가치가 아닌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가치를 우선해 신행정수도건설의 절박성을 수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세력과 잘못된 수도권이기주의를 대변하는 언론의 음해 왜곡으로 말미암아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의 위기를 맞은 것은 국가적 불행이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신행정수도 무산의 위기에 맞서 우리 충청인들은 앞장서 싸움으로써 신행정수도 건설 백지화 음모를 막아냈습니다. 정치인 여러분과 지역민 모두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신행정수도 건설 백지화를 막은 것에 그쳤을 뿐 지속추진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반절의 성과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신행정수도를 사수하는 길 앞에는 왜곡된 지방분권이라는 편향된 논의나 신행정수도 건설 없는 잘못된 균형발전 논의를 통해 신행정수 지속 추진의 당위성을 부인하는 온갖 책동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과 수도권의 대립을 부각시키며 충청권 이기주의로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 의지를 꺾으려는 일부 세력도 있으며, 충청권내 지역간의 분열을 유도하여 신행정수를 좌절 시키려는 음모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신행정수도건설 반대 세력에 맞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단결하여,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및 지지를 획득해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더욱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앞두고 정치권의 당리당략적인 접근이 또 다시 신행정수도지속추진을 가로 막지 않을까하는 염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과 같은 국가적 대사를 당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재단하고 왜곡한다면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충청권 정치인 여러분들의 초정파적 단합과 협력을 정중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 범충청권 협의회에 우리지역의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원,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은 물론,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이라는 원칙 속에 단합하고 이 원칙에 입각해 단일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의 관건은 범국민적인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란 점에서, 충청권 정치인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서 충청권지역민의 단결을 이끌어주시는 한편으로 전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지지여론을 획득하는데도 헌신적인 참여를 간곡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2004년 12월 17일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 충청권협의회 참가자 일동

■ 결성 기자회견문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 충청권협의회 결성 기자회견문

지난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위헌결정에 우리 500만 충청인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결코 요청하거나 유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지하였던 이유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이며, 지금도 이러한 믿음에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위헌결정 이후 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인 신행정수도 건설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500만 충청인은 단결하였고, 신행정수도 백지화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신행정수도 사수’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하는 우리들의 흔들림 없는 대원칙입니다.

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의 지속적인 추진을 바라는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하나의 역량으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의 관건은 500만 충청인의 단일한 대응과 전국적인 지지여론의 확산입니다. 이에 우리는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초정파적·범국민적 단결과 협력을 위해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충청권협의회”를 결성할 것을 500만 충청인과 충청권 정치인, 지역사회의 원로, 각계각층의 대표들에게 제안합니다.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대사로 정파적 지역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하나의 역량과 의지로 결집해야 합니다.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은 우리 500만 충청인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단결의 대원칙이자 명분입니다. 또한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의 당위성을 충청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의

홍보대사가 되어 서울의 한복판에서, 전라도의 섬마을에서, 경상도의 시골장터에서, 강원도의 산골마을에서 신행정수도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충청권협의회” 결성을 제안하며,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이 성사되는 그날까지 결사투쟁할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대전충남충북 3개시도지사와 충청권 국회의원, 광역의회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회의원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한 단일한 대응과 공동의 협력을 위해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충청권협의회”에 대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우선 예정지 2,160만평을 매입하여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3. 정치권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정파간 이해타산과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4. 언론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취지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당연히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충청인은 물론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2004. 12. 17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범 충청권협의회 참가자 일동